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농축산물 수입개방 전망



이 병 호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총무)

1. 한국 농업의 현실과 농업위기의 본질

해방과 더불어 미국의 잉여농산물 공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정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반농업적·반농민적 농업정책의 결과, 오늘 이 땅의 농업과 농촌은 해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곡 증산농정에서 개방농정으로 다시 구조조정농정으로 농업정책을 바꾸어가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농업과 농민은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을 뿐 농업이 전체 국민경제 속에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장된 적이 없었다. 계속적인 수입확대정책과 저농산물가격정책의 결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정체되고 거의 전 작목에서 가격의 폭락과 불안정이 일상화되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는 가속화 되었다.

35% 이하로 떨어진 식량자급률(89년 말 식량자급률은 37.2%로서 90년 말에는 35%를 훨씬 밑돌 것이 확실시 됨), 6조5천억원을 넘어선

연간 농축산물 수입총액(임산·수산물을 제외한 89년 총액), 농가부채의 누증과 빈농·소작농의 증가, 줄지 않는 이농대열로 인한 농업생산 담당자의 노령화와 여성화 등은 바로 현재 한국 농업과 농민의 위기적 현실을 나타내는 구체적 지표들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 가능한 길이 있다. 하나는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억제하고 국내농업의 생산기반을 복원하여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된 저투자 수탈로 농업 생산력이 저하되어 더이상 값싼 농산물을 독점자본의 요구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된 국내농업을 포기하고 값싼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에 의존하는 길이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식량 자급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올바른 농업정책의 방향인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자명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선택은 후자의 길이였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사이에 개방농정으로 전환되면서부터 방향을 잡아나가다가 '89. 4. 28. 농어

존발전종합대책(이하 농발대)으로 구체화된 농업구조조정정책이 국내적으로 선택된 적극적인 농업포기 정책이었고, 이것을 가속화하고 명분과 구실을 더해준 것이 바로 외압으로서의 우루과이라운드 농업교섭인 것이다. 일체의 수입제한 조치를 제거하고, 일국의 독자적인 농업정책의 실시를 규제하며, 수입농축산물의 검역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므로써 세계 농산물시장을 지배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교섭이 국내농업에 초래할 폐해는 물론 엄청난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한국 농업위기의 핵심은 바로 수입개방의 명분 또는 구실(농업구조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농산물 가격이 비싸고, 따라서 수입개방은 불가피하다)이자 수입개방의 보완대책(수입을 개방하는 대신 국내농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있는 농업구조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발대에 이미 배태되어 있는바, 바로 정부당국의 수입 확대와 농업포기의 정책방향과 이로 인한 한국농민의 희망과 의욕의 상실에 있는 것이다.

2. 우루과이라운드 결렬과 격화된 개방 압력

1970년대 이전까지 만성화된 세계 식량공급 부족 사태는 EC와 농산물 수입국의 과감한 농업투자의 결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급과잉으로 전환되고, 농산물 재고가 누적되자 미국·EC 등은 농업생산 및 수출보조금 경쟁이라는 끝없는 전쟁에 빠져들게 된다. 이로 인해 세계 농산물교역 질서는 덤핑수출이 일상화될 정도로 심각하게 교란되고, 미국·EC 등은 누증되는 재정적자로 시달리게 된다. 자유무역에 의한 세계 농산물교역질서의 광정이라는 화려한



명분으로 치장된 우루과이 농업교섭의 이면에는 바로 이와같은 미국과 EC의 속사정과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고,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의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도 아래,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의 공격적 제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는 관세인하가 주된 의제로 되었던 이전까지의 7차레에 걸친 다자간협상(라운드)과는 달리 단순한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교섭이 아니라 모든 비관세장벽(수입제한, 규제 등)의 철폐는 물론, 각국의 자율 소관인 독자적인 국내 경제정책을 무역과 연계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정책만 계획·집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국경조치, 국내보조, 수출경쟁,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등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는 이번 협상의 미

국측 제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특수성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점이다. 농업기술과 시설농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농업은 각 나라의 토양에 내리쬐는 태양과 내리는 비와 눈을 가지고, 그 나라 농민이 자기 나라의 토양과 기후와 식성에 알맞게 동식물을 성장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나라마다 생산이 기후 등의 자연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수급이 불안정하며, 잘못하여 한번 생산기반이 와해되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단히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농산물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완전 자유교역에 맡기자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농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각국의 고유한 권한인 국내 농업정책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의 배경이 된 미국·EC 등의 과도한 수출보조금과 덤핑 수출은 그것이 국제 농산물 교역질서 교란의 핵심이자 주범이므로 당연히 지양·철폐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그들 선진 수출국의 수출보조금과 덤핑수출 그리고 국내적인 농업투자부족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식량자급률이 저하되어 농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나라에서 시행되는 국내 농업 지원정책(미국·EC 등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은 철폐·감축의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농업은 앞서 지적된 특수성 외에도 단순히 직접적 생산물의 가치로만 확산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식량안보, 고용

기회 제공, 지역경제의 유지, 홍수·가뭄조절을 통한 국토환경의 보전 등이 그것인 바, 현재 포화상태를 넘어선 실업 주택, 교통, 공해 등 인구의 도시과밀화로 인한 폐해는 이미 우리 사회가 농업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치뤄야하는 사회적 대가의 시작일 뿐이다. 특히 서울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10조원에 달하며, 이의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이 67조에 이른다는 교통문제나 주택문제를 생각해 보면, 농업과 농촌의 파괴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농업의 직접적 생산물의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이 엄청나며, 이것에 대하여 무차별 개방을 강요하는 처사가 얼마나 부당한지는 곧 자명해진다.

넷째,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기준의 일률적 완화는 수입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섯째, 미국의 제안이 주로 거대 곡물 메이커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다국적 농업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대로 타결될 경우, 세계 농업생산과 농산물은 일부 대수출국, 그것도 거대 곡물메이커들에 의해 장악될 것이 확실하며, 이것은 세계적 차원의 농업파괴 및 식량공급의 불안정성 증대와 농산물 교역질서의 교환 그리고 식량수입국에 있어서의 만성적인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루과이 농업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협상이 개시된 이후, 미국 국내에서도 가축농단체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이 협상반대운동에 나섰으며, 농산물 수입국의 소농들도 우루과이 협상 저지운동에 나서서 이 운동을 국제적 연대운동으로까지 발전시켰으며, 89년 2월에는 가트민간회의에서 제네바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농민들의 이와같은 거센 반대운동과 각국이 농업교섭에서 보인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우루과이라운드는 86년 9월 출범 이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90년 12. 3~7일 사이에 개최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로 넘겨져 우루과이라운드 종결을 목표로 막판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내보조 10년간 75% 이상, 수출보조 10년간 90% 이상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농산물분야 우선타결 주장에 농업보조금 30% 감축과 15개 분야 협상 전체의 일괄적인 균형타결이라는 EC의 주장이 맞서면서 결국 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미국은 회담 초기부터, 만약 농산물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전체 협상을 거부하고 퇴장하겠다고 협상의 결렬과 결렬이 초래할 엄청난 무역보복조치를 무기로 자국안을 강요하는 한편, EC에 대하여 농업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의 70%만 감축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또 일본에 대하여는 쌀 시장개방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등 협상타결을 시도하였으나, EC내에서도 프랑스 등 농산물 수출국과 독일 등 수입국 간의 이해대립으로 실질적인 EC의 최종 협상안 마련마저 실패함으로써 회담은 끝내 타결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일방적인 미국 주도 세계경제질서의 일정한 변화와 농업보호에 대한 각국의 비타협적 태도를 보여준 이번 협상은 앞으로 2개월의 마지막 시한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안에 미국과 EC가 상호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UR협상의 결렬은 가트체계의 붕괴를 의미하고 가트체계의 붕괴는 자본주의 세계 무역체계 그 자체의 혼란을 의미하는 바,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개방화 시대에 이 사태는 미국은 물론이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판단

의 근거이지만, 비록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초의 미국 제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 될 것만은 확실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고려될 여지가 거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협상 결렬 이후 바로 개최된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미국 측은 우루과이 농업교섭에서 미국에 비협조적이었던 한국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농업협상안의 조정을 비롯한 대폭적인 양보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을 둘러싼 어렵기만한 내외정세 속에서 맞이하는 91년은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는 대단한 위기이며 또한 전환기이다. 정부당국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전화위복적 계기 운운하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는 금년도 농림수산업산을 한번쯤 훑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믿지 않은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 학계에서도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소수이며, 외면당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을 보장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과감한 농업투자로 농업생산력을 높임으로써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정책이 진정한 농업정책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농업은 농업을 최대한 축소하고 농민을 가능한 많이 이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농업정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계획되고 움직이고 있다.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생업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민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 스스로의 단결 이외에 남은 길은 없다. 우리 농민 스스로 단결하여 정치권을 움직이고 정부당국이 쇠신된 농업정책을 세우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우리 농업과 농민의 미래는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다. **●**